

<b>코스피</b> 2416.96 (+28.61)	<b>코스닥</b> 813.43 (+10.90)
<b>금리</b> (연·% 기준) 3.284 (-0.010)	<b>환율</b> (원·달러) 1307.70 (-3.50)

[뉴스]  
현대중공업  
대형엔진 생산  
2억마력 달성 기념식  
02



## 中에 수습조 들인 K반도체, 셈법 분주... 추가완화 절실

**美 반도체법 가드레일 '산 넘어 산'**  
中 5% 증설 등 극히 제한적 완화  
韓기업 한숨 돌렸지만 우려 여전  
제재대상기업과 공동연구도 막아  
업체, 신중검토 후 신청여부 결정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규제를 일부 해소했지만, 여전히 갈길이 멀다는 분석이다. 추가 규제 완화 여부에 투자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가드레일 조항' 세부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가드레일 조항은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부여하는 의무다. 중국 등 '우려대상국' 투자를 제한하고 기술을 공유해야 하는 등 제약을 뒤 미국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발표한 세부 규정은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다소 완화됐다. 특히 우려대상국에 대한 투자를 완전히 금지하지 않고, 10년간 반도체 생산시설을 5% 이

상늘리지 못하도록 축소했다. 산업부는 생산설비 기술과 공정 업그레이드 투자, 기존 설비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교체 등에는 제한을 두지 않아 현지 공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을 주요 생산 기지로 운영하고 있다. 20여년간 수습조원을 들였으며, 각각 낸드 플래시 40%, D램 50%를 생산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를 통해 다렌에서 낸드 공장도 운영하고 있다. 전문화적인 규모가 지급되는 미국 반도체 보조금을 포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됐을 정도다.

반도체 업계는 일단은 긍정적이라는 분위기다. 중국 공장을 한동안이나마 지속할 수 있는 수준인데다가, 가드레일 규정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가드레일 조항을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여전히 부담은 적지 않아 보인다. 투자 허용 수준이 극히 제한적인 데다가 첨단 장비 도입도 쉽지 않아 장기적으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 현지 생산 물량 대부분을 소비하는 중국과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잡음이 불가피하다. 미국이 다음달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을 떠날 수도 없다. 이미 적지 않은 투자가 이뤄진 곳인데다가,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막대한 투자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해서다.



메트로신문 '100세 플러스 포럼' 성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3 100세 플러스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SK하이닉스 우시캠퍼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새로운 투자 계획이 확정되긴 했지만, 단기간에 중국 생산 기지를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평가다.

이 뿐만 아니다. 미국은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면 제재 대상 기업과 공동 연구나 특허사용계약 체결도 금지했다. 중국 기업들과 사실상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세계에서 가장 반도체 수요가 많은 나라가 중국인 만큼, 영업 활동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업계는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추후 협의 결과

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한국 정부와 반도체 업계도 힘을 모으고 있다. 산업부는 23일 방한하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 담당 주요 실무진과 협의를 하겠다는 계획, 윤석열 대통령도 다음달 방미를 통해 협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YMTC에 19억달러를 추가 지원하며 반도체 굴기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보였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부동산 공시가격 전국 18.6% 하락 보유세 부담 감소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보유세 등 각종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6%,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건강보험료도 내려가고,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국가장학금 등의 수혜 대상도 늘어난다. <관련기사 2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 1206만호, 연립주택 53만호, 다세대주택 227만호 등 총 1486만호가 대상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복지제도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돼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

실제 지난 5년 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주택가격과 시세 반영비율 상승의 영향으로 총 63.4% 급등,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 부담이 일차적으로 경감됐고,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세금 부담 능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 부담을 추가 경감했다"고 설명했다. <2면에 계속>

/세종=원승일 기자 won@

## 반도체 육성 빨라진다... 대기업 투자 세액공제 15%로 ↑

여야 협치로 'K-칩스법' 기재위 통과  
중소는 현행 16%서 25%로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국가전략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세제혜택을 받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넓히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2일 의결했다.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위기에 놓인 한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논의된 개정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K-칩스법은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올해에 한해 신성장, 원천기술 및 일반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포인트에서 6%포인트로 상향하고, 모든 통합투자증가분의 10%를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도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 등이지만 이번 개정안이 처리되면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도 법률로 국가전략기술로 정한다.

여야 합의로 K-칩스법에 기재위 조세제정소위원회 통과한 만큼,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K-칩스법은 무난히 의결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K-칩스법이 통과되자 감사를 표하며 "최근 국내 설비투자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각국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경쟁력 제고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는 가운데 오늘 통과된 조특법 개정안이 반도체 등 국내 전략 기술과 기업들의 설비 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원들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급변하는 국제 경제 질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가 새로운 정책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대해 끌려가고, 이상황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기재부가 적극성 부분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측면에서 지금이 특이점이라고 보고 있다. 챗GPT 같은 인공지능뿐 아니라 미래차로 전환되는 과정은 상상은 초월할 정도로 빠르다"며 "기재부가 '야당이 주장하니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넣어주자'고 해놓고 구체적인 기술들을 시행령에서 이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6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민주,尹 '주60시간' 발언 비판... "줄속 개악 고백"  
▲ MB, 천안함·연평해전 희생자 묘역 참배... 사면 후 첫 외부행보 /사진 뉴시스

▲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해 6월에 연합 화력격멸훈련  
▲ 한 총리 "광주·전남 가뭄, 범정부 지원... 장기 대책 마련할 것"



▲ 권영세 통일부 장관, 취임 후 첫 일본 방문 /사진 뉴시스  
▲ 김기현, 이재명 기소에 "당대표 수행할 수 없지 않나"